"목적외·장기 복용 심각한 부작용 초래"

'구충제로 비염 등 치료 효과' 온라인 글 이후 판매 급증 의사·약사 등 의료전문가 "기생충 치료로만 사용" 경고

최근 온라인상에서 사람용 구충제 알벤다졸로 암・비염・아토피・당뇨 치 료에 효과를 봤다는 글들이 잇따르 면서 알벤다졸 매출이 급증, 품귀 현 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 가들은 알벤다졸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 고 있다.

30일 제주시내 약국 10여 곳을 확 인해본 결과 일부 대형 약국을 제외 하고는 알벤다졸이 이미 다 팔렸거 나,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관계자들은 지난해 동물용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제주대 학위수여식 연기

수여식 일정이 변경됐다.

제주대학교의 2019학년도 전기 학위

제주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 에서 '경계 단계' 로 격상되고 정부가 대규모 단체 행사 개최 등을 자제토

록 함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

혔다. 제주대 학위수여식은 당초 2월

14일 오전 10시30분 아라뮤즈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번에 변경된 일

정은 2월 21일 오전 10시30분 아라

진선희기자

뮤즈홀이다.

구충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후 사 람용 구충제인 알벤다졸에 대한 판 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제주시내 한 대형 약국 관계자는 "최근 알벤다졸 판매량이 5배가량 급증했다"며 "우리 약국의 경우 재고 를 미리 대량 확보해둬 물량이 여유 가 있는 편이지만 일반 약국 등에서 는 거의 품절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국 관계자는 "한 고객은 당뇨·비염 등에 좋다는 온라인 글을 보고 왔다며 알벤다졸 30개를 사 갔

매량이 급증하면서 제약회사 생산량 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 품귀 현 상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알벤다졸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지자 식품의약품안 전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은 알벤다졸의 부적절한 복용은 심 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 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 는 지난 21일 알벤다졸을 기생충 감 염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알벤다졸 장기간 복용 시 인 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 있지 않 으며,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당뇨

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알벤다졸 판 와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 중인 환자 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 생하거나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 다고 경고했다.

> 앞서 대한약사회도 지난 8일 구충 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두통, 간 기능 장애, 혈액 이상 등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 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은 "알벤다 졸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강제적으로 구매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 을 빚고 있어 구매가 쉽지는 않겠지 만 치료 목적에 맞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폭설내린 한라산··· 1100도로 제설작업 30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입산이 금지되고 일부 산간도로가 통제 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한라산 윗세오름에 39.0㎝의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진달래밭 37.1㎝, 어리목 21.3 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사진은 제설차가 1100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모습. 강희만기자

신구간 나눔장터 행사 취소

제주시는 2월 1일 종합경기장 야구 장 인근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신구 간 나눔장터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 다. 이번 나눔장터 행사취소 결정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가 제주에 상륙하는 것 은 물론 확산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행사 개최여부 와는 별개로 나눔장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가구 무상수거 체계 '폐가구 재사 용사업'의 일환인 물품기증 접수 업 무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재사용가 능 물품 기증을 원하는 시민들은 생 활환경과(728-3182~7)로 연락하면 된다.

대법원 "2018년 제주도노인회장 선거 무효"

지난 2018년 치러진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제주도연합회(이하 제주도노 인회) 회장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제주도노인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 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

제주도노인회는 지난 2018년 3월 19일 A씨와 당시 회장이었던 B씨가 후보로 나선 회장 선거를 실시해 16 표 중 11표를 획득한 B씨를 신임 회

장으로 선출했다. A씨는 5표를 획득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선거가 규정 을 위반한 채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 기했다. 선거 직전 제주도노인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등 재해야 하는 선임연합부회장과 선임 이사 7명을 자의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노인회 측은 이사 임 면에 대해 권한이 있는 회장이 선거 인명부 작성 전에 일부 이사들의 동 의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작성된 선 거인명부는 B씨에 의해 일부 임원을 배제한 채 작성된 것으로 운영규정 에 위반된다"며 "A씨와 B씨의 득표 차가 6표이고, 선거인에서 배제된 임 원이 7명인 점에 비춰보면 운영규정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 저히 침해하고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노인회는 항소 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제주도노인회는 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상민기자

영리병원 재판 1년 2개월만에 시작

제주지법 제1행정부 4월 3일 첫 변론 진행

진료조건 적법성 공방 예상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 조 건'을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에 대한 재판이 소송이 제기된 지 1년여 만 에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 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 로 지난해 2월 제기한 '외국의료기 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 소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을 오는 4 월 3일 오후 3시 301호 법정에서 진 행하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녹지 측은 재판이 지연되자 지난해 10월에는 법원에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취 지의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도 했다.

현재 녹지측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

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 인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또 녹지 측은 제주도가 지난해 4 월 17일 법정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 로 개원 허가마저 취소한 것도 부당 한 처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 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을 받아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것이 어서 법적 문제가 없고, 개원 허가를 취소당한 책임도 법정 기한을 넘겼 던 녹지 측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이

한편 778억원이 투입된 녹지국제 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 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 층·지상 3층) 규모로 2017년 7월 완 공됐다. 이후 제주도와의 갈등 속에 개원 허가가 취소되면서 현재 병원 은 텅빈 건물로 방치돼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피자 대접' 원 지사 또 선거법 위반?

제주선관위 "현재 조사중"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또 다시 선거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원 지사가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에 피자 25판을 선물한 행위가 '공직선 거법'에 저촉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 30일 밝혔다.

원 지사가 선물한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 진비로 구입한 것이며, 금액은 6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 지사 는 "지난해 11월 25일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사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 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당시 현장이 담긴 CCTV를 확인하는 등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 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 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 혹은 선관위 내부에서 주의·경고 조 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공 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년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모 웨딩 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송은범기자

"관광객 직접 응대하는 노동자 보호조치 시급"

제주관광서비스노조는 30일 입장문 을 내고 "관광객을 직접 응대하는 7 만 관광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응대하는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은 불안감을 갖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7만 관 광산업 노동자와 도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